

월요광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석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되었다. 하지만 초기 일부 사업지는 선정만 해 놓고 계획 수립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지원금을 못 받은 지자체도 있었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2017년 선정된 68곳의 도시재생 사업지는 모두 다음해 하반기가 돼서야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국토부는 1년 가까이 지원금을 교부하지 못했고 사업은 그만큼 늦춰졌다. 국비 교부가 끝나고 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다. 지자체에서 용역 발주, 보상 협의 등 사업 준비 과정을 거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핵심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사업성 문제 등의 이유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아 사업이 취소되거나 행정 절차와 자체 협의 과정이 늘어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되기도 한다.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예상대로 속도가 나지 않자 국토부는 지자체의 사정만 무조건 들어주고 기다려 주기

어렵다며 급기야 책패도 들고 있다. 각 지자체의 성과를 파악해 시도별로 선정 물량을 조절하거나 도시재생 관련 사업 지원 배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대로 빨리 사업 성과를 내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 방식과 방법에서도 분명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재생 방법을 바꿔 새롭게 신청과 평가를 거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첫째, 공공 주도로 쇠퇴하거나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을 거점으로 신속하게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이다. 둘째, 공기업이 시행하는 거점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재생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는 사업인 총괄사업관리자 뉴딜사업이 있다. 셋째, 도시재생 전략 계획이 수립된 지역 내에서 활성화 계획 없이 SOC 임대주택과 상가공급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점 단위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의 도입이다.

그러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 사업 방식과 방법의 변화만으로 성과를 내고 원래 의도하였던 바를 이룰 수 있을 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국토연구원 자료를 보면 공모 가이드라인이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광역지자체의 사업 선정 자율성 확보는 매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형태의 사업이 발굴·추진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지역과 다양한 사업 유형이 있지만 활성화 계획의 내용은 차이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내용들이 많았다.

그리고 재생사업 현장에서 보면 사업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 전담 인력은 정체 상태로 인력 한계 때문에 신규 제도 도입 및 적용을 위한 준비 시간 또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주민 주도형 재생사업이라고 하지만 행정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일의 진행은 늦어지고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재생사업에 대한 지역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주시와 각 지자체 등의 도시재생 부서는 기피 부서가 된 것 같다. 많은 업무와 민원 등에 시달리면서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대로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되고 기피가 아닌 지원 부서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재개발은 강제 수용 방식이 일부 사용되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을 막는 착한 재생을 앞세운 도시재생이 필요하다. 수용 방식을 쓰지 않고 협의 방식을 쓰는 것인데, 이는 주민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한데 강제 수용이 사용되는 재개발도 최소 5-10년이 걸린다. 도시재생을 사업 속도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도시재생 사업 지역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 토지주들과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시대적 지역적 상황이 변하면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도시재생은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단기적 목표치를 우선 채우려 하기 보다는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고 바람직하다.

꿈꾸는 2040

명예와 명예의 간극에서 있는 광주



정준호 위민연구원 이사·변호사

2021년 여름이 지나가고 있다.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끔찍한 참사가 광주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후진 국형 재해라고 했다. 불법 철거와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지분 쪼개기, 조합장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와 정관계 로비 그리고 조폭 문제까지 현대 사회의 부조리에 관한 종합 사례라고 해도 좋을 단어들 이 한꺼번에 뉴스를 장식했다.

타 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 된 뉴스는 5·18 3 단계 중 한 곳의 회장이 이와 관련하여 해외로 도주했다는 것이었다. 뉴스에 달린 댓글들은 이 곳에 언급하기조차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다. 해당 단체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전 한 공중파의 생방송 토론에서는 사과 발표 이후 어떠한 실질적인 자정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상대 패널은

애초에 기대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지만 그야말로 무기력과 허탈함 그 자체였다. 수사의 진척을 위해서는 핵심 관계자의 귀국만을 마냥 바라고 있었고, 지분 쪼개기는 실질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서 공백만을 확인했다. 이목이 집중된 이른바 딱지 분양권을 매개로 한 정관계 로비는 리스트가 소문으로 돌고 있음에도 공식적인 확인조차 없었다.

사고 발생 후 두 달을 훌쩍 넘긴 지금쯤이면 얽히고설켜진 지역의 이권 관계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하면서 재개발 사업을 지렛대로 지역의 토호로 변신을 꾀하고 있는 세력과 이를 묵인하고 있는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타 지역의 시민들의 예상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리라.

그러나 실상은 너무나 무기력한 수사 결과 발표, 도피한 해외 인사와 유력 대권주자의 사진만이 네거티브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되고 있다. 그 사이에서 확인되는 2021년의 광주의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 버린 5·18과 조폭 도시라는 오명, 그리고 상대의 흠집내기 재료를 찾는 지역으로서의 광주라는 참담한 현실뿐이다.

어느 지역보다도 목소리가 큰 재야나 시민단체들도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 제보를 기다린다는 진보 정당의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렸지만 과거 고노회찬 의원의 삼성장학생 명단 폭로와 같은 풍경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기에 부끄러운 이번 사건 뉴스에 달린 댓글들을 관통하는 한 가지 정서가 있다. 광주는 명예로운 도시라는 수사(修辭)가 아저편 그동안 강요되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광주 내부에서는 광주의 명예를 이야기 하지만 외부에서는 광주가 짙어지고 있는 명예를 더 크게 바라보는 것 아닐까.

“5월은 명예가 아니고 명예이며, 채권도 이권도 아니고 채무이고, 희생이고 봉사입니다. 5월은 광주의 것도, 구속자·부상자·유가족의 것도 아니고 조국의 것이고 전체 시민과 민족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략)”

5·18기념재단의 창립 선언문이다. 냉정히 광주의 명예는 현재 오염되어 있다. 학동 참사와 같은 비극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작금의 명예와 명예의 간극을 해소하지는 이야기가 없는 현실이 슬프다. 시장 팔죽집의 자식은 버스 안에서 쫓다운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수사 대상자는 해외로 도피하고 로비를 받은 공무원들은 소문에만 그친다. 2021년 광주 여름의 모습이다.

수필의 향기

가장 늦게 피는 꽃



박용수 광주동신고 교사·수필가

봄이 되면 꽃들은 경쟁하듯 피어난다. 금빛 개나리와 영춘화가 그략고 지천을 물들이는 은빛 목련은 마치 시상대 위 메달을 목에 건 선수처럼 우아하게 핀다.

올림픽 경기도 개화는 빨리, 향기는 멀리 꼭 메달 경쟁 같다. 개나리꽃처럼 먼저 도달한 이에게 금메달을 목에 걸어 주고 환호한다. 꽃도 인간처럼 선착순이라면 모든 꽃이 봄을 향해 질주할 것이다.

올림픽을 보다 보면 승패뿐 아니라 선수들의 노력과 삶에 얽힌 이야기들을 알게 된다. 경기만 보면 미팅한 그림에 지나지 않을 터인데 그들이 써 내려온 분투와 삶의 과정이 경기장에서 쏘는 투혼 못지않게 우리를 더 감동시키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올림픽 정신이자 인간 공부가 아닐까. 선수들의 목표가 메달이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읽는 것이 우리들 목표인지 모른다.

승자의 환희 너머로 아직 피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아쉽고 속상해서 눈시울이 붉어진다.

다. 내년이든 다음해든 언젠가 활짝 피어나기를 바란다. 올림픽 종목만큼이나 꽃은 종류도 피는 시기도 다르다. 무궁화는 이름처럼 무궁하게 피고 진다. 피고 지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백일홍도 파종부터 추수까지 무려 백일동안 피고 진다. 꽃을 숨기고 만천하를 부리는 무화과는 속에서 핀다. 화무십일홍이 무색하다. 꽃은 먼저고 늦게고 다투지 않는다. 가장 늦게 피는 해바라기나 국화도 게을러서 늦게 피는 게 아니다. 아무리 날씨가 좋다고 가을 국화가 봄에 피지 않고, 성미가 급하다고 겨울 꽃이 봄에 피지도 않는다. 때를 기다렸다가 자신의 차례가 오면 어김없이 꽃대를 내민다. 순서가 아닌 질서, 순리대로 핀다. 때가 아니면 생존할 수 없기에 꽃은 자기 차례를 맞춰 핀다. 끝내 썩지 않고 시기에 따라 땅을 뚫고 나오는 힘, 꽃들이 가진 절제와 용기다. 빠르고 늦음은 순서가 아닌 인간의 시선이다. 불꽃은 봄에, 가을꽃은 가을에 각자 최적의 생존 방식으로 핀다. 그래서 먼저도 나중도 없다. 꽃밭의 수많은 꽃들은 때가 되면 무덤무덤 피어난다. 때를 따르는 순명(順命), 꽃은 그래서 아름답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 야구부가 있었다. 고교 야구가 인기 있던 시절에 대학에 가지 못한 친구도 있었고, 대학에 갔어도 졸업할 때 프로그라운드로부터 지명을 받지 못한 친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40년이 지난 어느 날, 친구 부친의 장례식장에서 만난 그들은 놀라웠다. 어떤 이는 일일 노동자로, 또 한 친구는 작은 공장 사

장으로, 또 한 친구는 건설회사 부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모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각자 제 꽃을 피우고 있었다. 후회 없는 삶이 있겠는가마는 ‘후회는 없다’고 당당하게 하는 그 입술, 그 말에 진한 향기가 묻어났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9회 말 굳세게 자신의 삶을 역전시킨 역전의 꽃들이었다.

나는 희망버스 김진숙 씨와 송경동 시인의 삶을 종종 보고 배운다. 내겐 감히 보는 것조차 경이감을 주는 사람 꽃이다. 이들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노동자 김진숙 복직 및 명예회복을 위한 청와대 앞 단식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타인을 위해 우리를 위해 노동현장을 개선하려는 그들이 피은 꽃향기에 먹먹해지곤 했다. 어느 노동자처럼 이름만 내세우거나 그걸 글 좀 쓴다고 거만한 몇몇 시인과 근본이 다르다. 선수들의 땀, 투지,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승패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사랑하는 방식이 올림픽 정신이라면 이들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노동 정신과 작가정신 자체이자 그 혼이 피워낸 영원히 지지 않을 소금 꽃이다.

어떤 꽃도 늦게 피는 꽃은 없다. 다만 순리대로 필뿐이다. 대기만성이나 칠전팔기는 인간의 삶 속에서 핀 꽃들에게 붙이는 찬사이다. 순명을 기다려 피는 것이 꽃이라면 그 꽃은 어떤 가장 늦게 피는 꽃, 그건 지금 내일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당신, 당신이 그 꽃인지 모른다.

社說

코로나 장기화로 의료인 고통 한계 다다랐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역의 최전선을 지켜 온 보건 의료 노동자들은 인력 확충과 열악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전국 134개 의료기관, 122개 노조 지부는 지난 17일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광주·전남 지역 보건의료노조 조합원은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비롯해 목포·순천·강진 의료원 등 12개 지부 56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정부 및 사용자와 교섭을 벌여 왔지만 진전이 없었다며 쟁의기간 중에도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핵심 요구 사항은 처우 개선과 공공 의료 시설 및 인력 확충 등 여덟 가지다. 의료인들은 1년 6개월이 넘도록 환자를 돌봐 왔지만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실정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간호사들의 경우 1인당 40명이 넘는 환자를 담당하는 등 격부에 시달리고 있다.

사실 우리 사회는 코로나 발생 이후 의료인들에게 지나치게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 왔다.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환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데도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지탱해 온 방역망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고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존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특히 지금도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00 명을 넘나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건 의료노조의 파업이 현실화한다면 방역 체계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병원 측은 이제라도 교섭에 성실히 임해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인구급감·지방소멸 당장 지금부터 대비를

광주와 전남의 인구가 2117년에는 각각 35만 명과 49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광주시 인구 148만 명, 전남도 18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96년 뒤에는 246만 명의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예견된 일이지만 충격적인 결과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인구 감소 추세와 함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소멸 현상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가 지극처럼 지속되면 국내 인구도 꾸준히 감소해 151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 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 등 13개 시도에서 30년 후인 2047년에는 최대 23.2%의 인구가 감소하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최대 44.4%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229개 시·군·

구 중 2047년에는 157개, 2067년 216개, 2117년엔 221개 지역이 ‘소멸고위험 지역’에 들 것으로 보인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7년 인구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고흥·보성·함평·신안 등을 비롯해 30년 뒤인 2047년에는 구례·진도 등이 전국 222개 시·군 중 미래 소멸위험지수 상위 20위 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다. 광주시의 경우 2047년에는 북구와 서구 등이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동안 출산·양육 지원에 치우쳤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역 인구 불균형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 그럼에도 개발 및 인프라 건설은 멈추지 않고 있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게는 부담이 될 뿐이다. 지금 당장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설계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無等鼓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미국이 빠져나간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이 순식간에 장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 경각심을 갖는 듯하다. 아프가니스탄과는 상황이 다르지만, 우리 또한 적어도 국방 분야에서는 미국의 지원에 크게 기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조지 W 부시 전 미국 정부에서 백악관 수석 연설보좌관을 지낸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

아프간 탈출

니스트 마크 티센은 최근 아프가니스탄 정권 붕괴와 관련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만약 한국이 이처럼 지속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이었다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순식간에 무너졌을 것이다. 미군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은 사실상 없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를 적극 반박했다. “아프간 사태를 빚대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대한민국도 아프간 꼴이 날 것’이라고

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보유 국가이자 10대 무역 대국인 우리나라와 지금의 아프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함담일 뿐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란 점에서 무언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국민을 내동댕이쳐 채 밧처럼 빠른 속도로 도망치는 지도자나, 지원금을 빼돌리는 부패한 관리, 돈으로 회유하는 적군에 포섭될 군인과 경찰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가 가

득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냉혹한 국제관계에서는, 미국이

이번에 보여 준 것처럼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혈맹인 한미 관계는 아프가니스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제논에 물 대기’식 해석에만 기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제관계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정립하고, G2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에 걸맞은 안보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닐까. /송영길 정치부장 redplane@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